

국가부채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12. 1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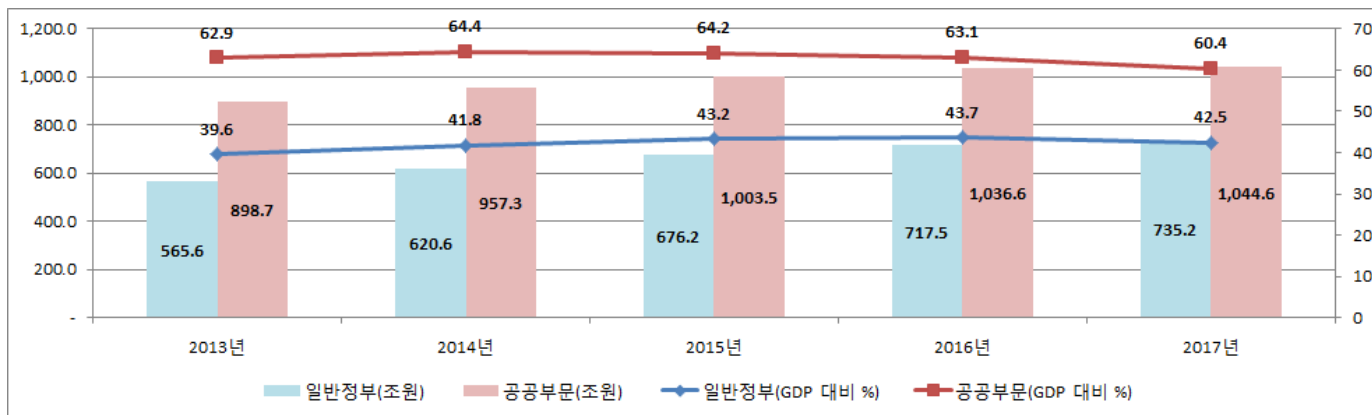
- 01 연구배경
- 02 연구목적
- 03 국가부채 산출 및 관리현황
-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01 연구배경

1.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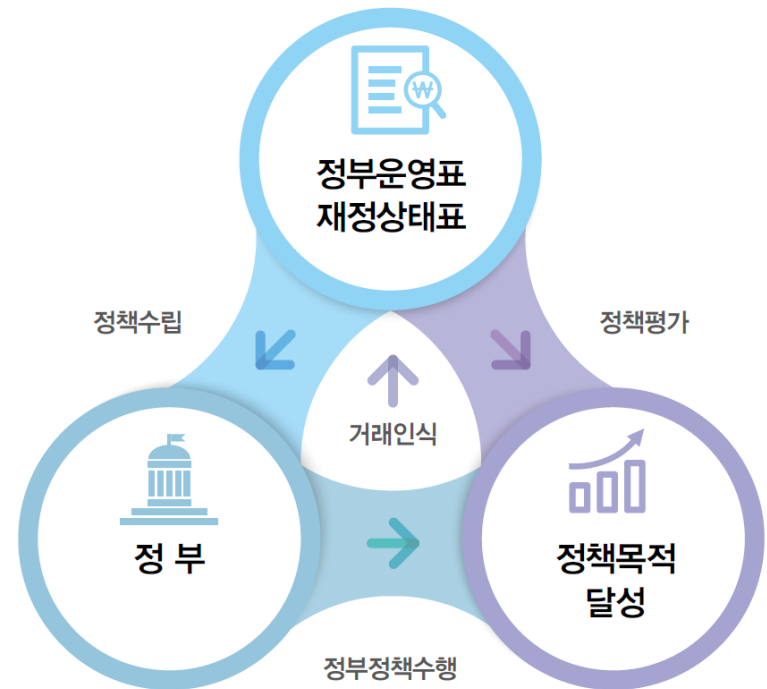
-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
- ◆ 공공부문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 또한 증가하여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 ◆ 이렇듯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표를 사용
- ◆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반정부(D2) 및 공공부문 부채(D3)**와 같은 국제통계지침에 의해 산출된 정보에 비해 **국가채무(D1)** 등과 같은 현금주의 정보를 **재정계획 수립 등에 사용**



01 연구배경

2. 발생주의 재정지표

- ◆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발생주의 정보** 보단 기존의 **현금주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
- ◆ **발생주의 재정정보**는 현금주의 재정정보에 비해 **재정위험을 예측하는데 유용**
 - 발생주의 재정정보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에 비해 **경제적 사건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할 수 있어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
 - 발생주의 재정정보가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02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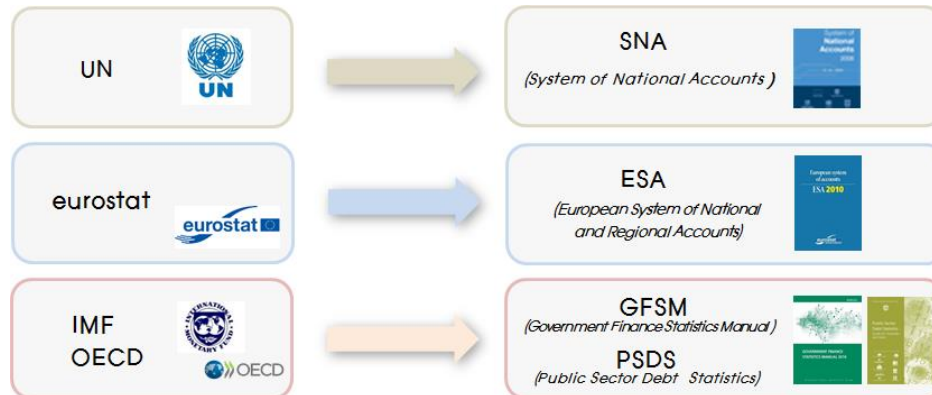
1. 연구목적

- ◆ 발생주의 재정정보의 유용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 재정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의 연계 미흡, 해석의 어려움, 정보유용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원인
- ◆ 이에 발생주의 재정정보에 대한 산출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 발생주의 기준의 부채통계는 BTL과 같은 금융리스 부채, 각종 미지급금 등 현금주의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공공기관 부채 등과 같이 정부에 재정부담이 전이될 가능성이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어 정보유용성이 높음
- ◆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에 발생주의 부채통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통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

03 국가부채 산출 및 관리현황

1. 국제기준 변화

- ◆ 정부에서 산출하는 재정통계는 IMF의 재정통계지침(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하 GFSM)을 따름
- ◆ 재정통계지침이 GFSM 1986에서 GFSM 2001로 개정되고 작성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 ◆ 뒤이어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의 재정적, 대외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의 산출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MF, WB,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연합하여 2012년에 공공부문 채무 작성에 관한 국제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이하 PSDS)을 마련



03 국가부채 산출 및 관리현황

2. 우리나라 국가부채

- ◆ IMF 주요국은 GFSM 2001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GFSM 1986에 따라 현금주의 수입-지출만 각각 작성하였고 국가채무를 산출하여 부채를 현금주의 채무관점으로 관리
- ◆ 하지만 IMF 주요국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정부범위를 재설정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GFSM 1986에 따라 작성된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경우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
 - 또한 LH, 한전 등 공기업 부채 포함 여부에 따른 국가부채 논란이 지속
- ◆ 정부는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PSD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을 추진
- ◆ 이에 정부는 2011회계연도에는 GFSM 2001을 도입하였고, 2012회계연도부터는 PSDS에 따라 매년 공공부문 부채(D3)와 일반정부 부채(D2)를 산출하여 발표하며, OECD에 제출

03 국가부채 산출 및 관리현황

3. 국가부채 산출 및 관리현황

- ◆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산출
- ◆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채무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로 한정하고 있는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집계하여 산출
- ◆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부채로, PSDS에 의하여 산출
 - PSDS에서 정부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회계·기금 및 공공기관으로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바탕으로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
 - 부채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debt instrument)으로 정의하며, 채무상품은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차입금(loans), 기타 미지급금(other accounts payable) 등을 포함

유형	규모(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D1)	660.2조원 (38.2%)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D2)	735.2조원 (42.5%)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D3)	1044.6조원 (60.4%)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03 국가부채 산출 및 관리현황

3. 국가부채 산출 및 관리현황, 계속

- ◆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는 735.2조원(GDP 대비 42.5%)으로 중앙정부 683.4조원(GDP 대비 39.5%), 지방정부 63.9조원(GDP 대비 3.7%) 및 내부거래 △12.1조원(GDP 대비 0.7%)으로 구성
- ◆ 2017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044.6조원(GDP 대비 60.4%)으로 일반정부 735.2조원(GDP 대비 42.5%), 비금융공기업 378.5조원(GDP 대비 21.9%) 및 내부거래 △69.2조원(GDP 대비 4.0%)으로 집계

(단위 : 십억원)

	2016년(A)		2017년(B)		증감(B-A)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1,036.6	63.1	1,044.6	60.4	8.0	△2.7
A. 일반정부 부채(a+b-c)	717.5	43.7	735.2	42.5	17.7	△1.2
a. 중앙정부	661.2	40.3	683.4	39.5	22.2	△0.8
b. 지방정부	66.8	4.1	63.9	3.7	△2.9	△0.4
c. 내부거래	10.5	0.6	12.1	0.7	1.6	0.1
B. 비금융공기업 부채	386.4	23.5	378.5	21.9	△7.9	△1.6
a. 중앙 공기업	350.9	21.4	345.8	20.0	△5.1	△1.4
b. 지방 공기업	43.6	2.7	41.2	2.4	△2.3	△0.3
c. 내부거래	8.1	0.5	8.5	0.5	0.4	0.0
C. 내부거래	67.4	4.1	69.2	4.0	1.8	△0.1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1. 자산·부채 종합관리 (현황 및 한계)

- ◆ 국가채무는 정부가 채무자로서 직접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로 활용
- ◆ 정부는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관리
 -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금융성 채무는 용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산매각, 용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단위: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채무(A+B)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41.0	790.8	843.0	897.8
(GDP대비, %)	32.6	34.1	35.7	36.0	36.0	35.9	39.4	40.2	40.9	41.6
적자성 채무 (A)	253.1	286.4	330.8	359.9	374.8	379.2	426.8	468.1	519.1	579.9
일반회계 적자보전	172.9	200.6	240.1	271.3	289.6	300.4	348.2	394.7	451.3	518.8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80.2	85.9	90.7	88.6	85.1	78.8	78.6	73.4	67.8	61.1
금융성 채무 (B)	236.7	246.7	260.6	267	285.4	301.3	314.2	322.7	323.9	317.9
외환시장 안정용	171.0	185.2	198.3	209.8	222.3	234.9	247.3	260.4	273.1	286.2
서민주거 안정용 등	65.7	61.6	62.3	57.2	63.1	66.4	66.9	62.3	50.8	31.7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1. 자산·부채 종합관리 (현황 및 한계, 계속)

- ◆ 국가채무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유용한 지표이지만 문제점이 지적됨
- ◆ 대표적으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하는 대응자산의 관리가 명확하지 않음
 - 금융성 채무로 구분되는 회계·기금 중 대응자산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거나, 대응자산이 현격히 부족한 경우가 발생

▪ 외환평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결과 환율평가손실 등 누적 손실에 따라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상환에 부족

(단위: 십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산(A)	132,331	149,297	166,914	182,678	183,998	196,270
부채(B)	172,965	186,555	199,674	211,009	224,952	236,147
부족액(A-B)	-40,634	-37,258	-32,760	-28,331	-40,954	-39,877
자산/부채(A/B)	76.5%	80.0%	83.6%	86.6%	81.8%	83.1%

- 이는 현행 금융성 채무의 경우 발행기준 시점 기준으로만 관리가 되어 대응되는 금융자산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
- ◆ 금융성 채무 구분의 경우 전적으로 대응자산의 선정과 평가가 중요하지만, 현행 국가채무 구분 방식으로는 금융성 채무가 상환 여력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1. 자산·부채 종합관리 (해외사례)

- ◆ 국제통계지침 및 국제기구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로 **부채와 금융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
- ◆ GFSM 2014, SNA 2008, PSDS 등 국제통계지침은 다양한 재정지표를 제시하는데, **부채총량 통계뿐만 아니라 대응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등을 제시

국제기준	재정지표	산출방식
GFSM2014	순금융자산 Net financial worth	순금융자산=금융자산의 저량-부채의 저량
SNA 2008	순금융부채 Net financial liabilities	순금융부채 = 총부채 - 금융자산
PSDS	순채무 Net debt	총채무 -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자산의 저량

- ◆ OECD의 Economic Outlook에서는 총부채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금융부채 (Net financial liabilities)**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으며, IMF는 IMF GFS Year Book에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을 매년 공개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1. 자산·부채 종합관리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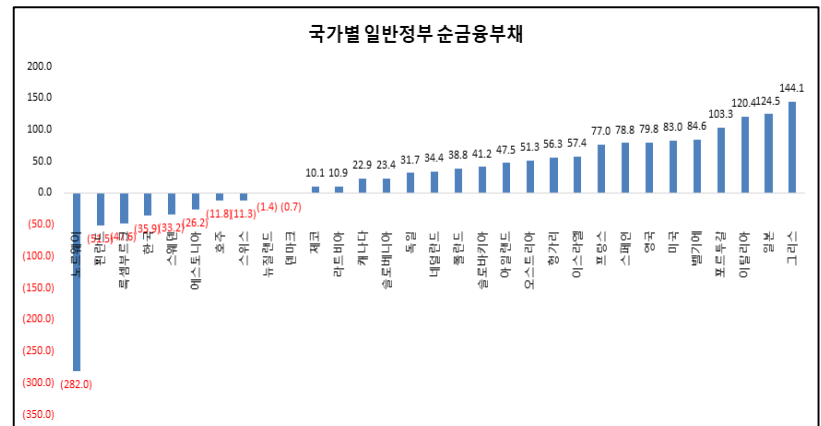
◆ 국제통계지침(PSDS, GFSM)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활용해 **일반정부 기준의 순금융부채** 통계를 산출하여 **국제비교용으로 관리할 필요**

● 정부는 2012년부터 **GFSM에 따라 일반정부의 자산(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와 관련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서 **국제통계지침에 따른 순금융부채**를 시범 산출

(단위: 조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채(A)	567.4	621.7	677.3	718.9	737.4
금융자산(B)	1,007.1	1,102.4	1,203.3	1,299.3	1,396.2
순금융부채(A-B)	-439.7	-480.7	-526.0	-580.4	-658.8
GDP 대비 비율(%)	-29.3%	-30.8%	-31.7%	-33.3%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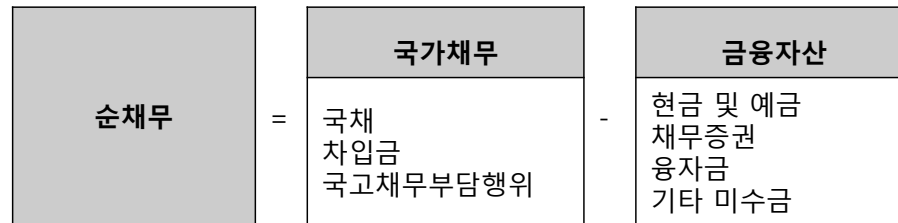
● 시범 산출한 순금융부채를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노르웨이, 핀란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4번째로 양호한 수준**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1. 자산·부채 종합관리 (개선방안, 계속)

- ◆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가채무(D1)에 대응되는 금융자산을 활용한 순채무**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관리
 - 순채무 산출 시 국가채무에 대응되는 금융자산 집계 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할 필요



- ◆ 국제비교 목적의 **순금융부채**와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의 **순채무**는 기존의 부채 총량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대응자산으로 하여 산출된 지표이기 때문에 **채무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
- ◆ 이러한 지표는 금융자산과 채무를 연계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유용성이 검증된 **자산-부채 종합관리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순채무 상환계획수립 등 재정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2.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현황 및 한계)

-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PSDS) 등 **연간확정치 통계가 당해 연도 종료 후 1년 가까이 지연되어 공표되는 단점**
- ◆ 정부의 재정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 활용에도 여러 한계가 있어 최근 **재정통계의 산출시기를 정부결산에 맞춰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 IMF에서도 특별통계공표기준(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Plus)을 통해 **공공부문 부채의 분기별 공표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DGI-2에서도 일반정부 부문에 대한 분기별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

Transaction		Total gross debt															
Sector		General government															
Measure		Current prices, annual levels															
Adjusted		Not seasonally adjusted															
Time		Q1-2014	Q2-2014	Q3-2014	Q4-2014	Q1-2015	Q2-2015	Q3-2015	Q4-2015	Q1-2016	Q2-2016	Q3-2016	Q4-2016	Q1-2017	Q2-2017	Q3-2017	Q4-2017
Country	Unit	▲▼	▲▼	▲▼	▲▼	▲▼	▲▼	▲▼	▲▼	▲▼	▲▼	▲▼	▲▼	▲▼	▲▼	▲▼	▲▼
Australia	Australian Dollar, Millions	888 284.0	897 548.0	941 488.0	953 029.0	974 440.0	993 453.0	1 026 917.0	1 021 944.0	1 052 543.0	1 126 903.0	1 152 845.0	1 159 477.0	1 179 730.0	1 161 658.0	1 152 582.0	1 166 048.0
Austria	Euro, Millions	288 943.0	294 972.8	291 246.7	305 040.9	311 218.6	317 044.1	320 603.6	319 875.9	325 237.3	325 149.9	318 674.1	324 435.1	320 010.3	322 489.3	321 463.3	320 096.3
Belgium	Euro, Millions	450 532.0	453 460.0	454 905.0	448 150.0	465 678.0	460 580.0	461 373.0	455 372.0	470 791.0	474 949.0	475 532.0	470 403.0	478 641.0	475 940.0	484 118.0	473 167.0
Canada	Canadian Dollar, Millions	2 072 862.0	2 104 607.0	2 121 712.0	2 136 143.0	2 147 146.0	2 199 519.0	2 234 401.0	2 252 736.0	2 245 922.0	2 286 976.0	2 282 639.0	2 286 290.0	2 293 910.0	2 318 003.0	2 336 955.0	2 352 896.0
Chile	Chilean Peso, Millions
Czech Republic	Czech Koruna, Millions	2 149 478.0	2 133 072.9	2 155 291.0	2 122 654.0	2 170 250.0	2 178 941.0	2 265 256.0	2 155 211.0	2 172 558.0	2 168 707.0	2 131 586.0	2 063 800.0	2 239 169.7	2 241 294.0	2 051 481.2	2 089 720.0
Denmark	Danish Krone, Millions	977 786.8	996 418.6	1 032 345.3	1 033 499.0	1 028 346.5	982 062.4	964 274.4	969 870.2	959 108.9	939 746.1	923 376.5	938 785.4	930 504.3	911 515.5	917 883.7	940 453.6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2.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해외사례)

- ◆ IMF의 분기별 재정통계 매뉴얼에서 **분기별 재정통계 산출의 중요성과 추계방식**을 설명
 - 분기별 재정통계 산출에 있어서는 **재정통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분석적 유용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
 -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감사받은 데이터와 감사받지 않은 데이터의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감사받지 않은 데이터**라도 분기별 재정통계를 작성하는데 **충분**
 -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완벽한 연결(내부거래 제거)**도 중요하지만, 재정통계 작성자들은 **분기별 재정통계 연결의 경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주장
 - 정부단위 간의 거래 중 **저량(stock)**에 대한 우선순위는 **채무증권과 차입금**에 두어야 한다고 기술
- ◆ **국가별 분기별 재정통계 산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GFS를 산출하고 해당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발표
 - **호주**의 경우에도 GFS는 **호주 통계청**이 분기별로 산출하고, 해당 분기말부터 **3개월 이내**에 발표
 - **영국**의 경우 국가통계기관인 **영국 통계청**은 국민계정과 GFS를 분기별/연도별로 작성하고 **공표**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2.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개선방안)

- ◆ 국제기구에서 분기별 재정통계 작성을 권고하는 이유는 일반정부 부문의 재정운영, 재정 상태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적시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 ◆ 따라서 연간확정치 재정통계 산출을 앞당겨 조속히 공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시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잠정치 정보를 공개하여 정책당국 등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
- ◆ 재정통계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확정치와 잠정치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
- ◆ 연간확정치 통계가 발생주의 재무제표 및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PSDS에 따라 산출되는 것과 달리 잠정치 통계는 '08 SNA를 따르는 자금순환통계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해 정부부문에 대한 잠정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
 - 추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잠정치와 확정치 산출에 있어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연계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2.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개선방안, 계속)

◆ 우선, 일반정부 및 비금융공기업 부채구성을 검토하여 기존 자료를 활용해 **잠정치를 어느 수준으로 작성 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일반정부의 경우 채무증권과 차입금이 2017년 기준으로 91.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미지급의 경우 매우 적은 편인 것을 확인
-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채무증권과 차입금이 2017년 기준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어 기타미지급의 규모가 일반정부와는 달리 상당한 규모를 기록
 - 이는 대부분 LH 및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특성상 발생한 매입채무,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등이 큰 규모를 차지

(단위: 조원, %)

부문	계정	2016년(A)		2017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일반정부	총부채	717.5	100.0	735.2	100.0	17.7	-
	채무증권	554.7	77.3	570.3	77.6	15.7	0.3
	차입금	100.2	14.0	103.5	14.1	3.3	0.1
	기타미지급	62.6	8.7	61.4	8.3	-1.2	-0.4
비금융 공기업	총부채	386.4	100.0	378.5	100.0	-7.9	-
	채무증권	227.8	59.0	215.4	56.9	-12.4	-2.0
	차입금	48.3	12.5	51.3	13.6	3.0	1.1
	기타미지급	110.3	28.5	111.8	29.5	1.5	1.0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2.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개선방안, 계속)

◆ 연간확정통계가 기초자료의 집계방식을 따르는 것과 달리 **잠정통계는 자금순환통계를 바탕으로** 기초자료 입수정도에 따라 **집계방식과 추정방식을 혼용하여** 작성이 가능

- SNA 기준으로 작성된 **자금순환표 자료를 PSDS에 맞게 내부거래, 채권평가, 부채포괄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
- **채무증권, 차입금 항목은 자금순환통계를 통해** 전수 조사된 자료가 입수 가능하므로 **부채 잔액**을 집계
- **정부회계 외 부문의 기타부채항목은** 자금순환통계에 서도 분기결산을 하는 일부 기관의 기초자료만 입수가 가능하므로 **증감률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
- 정부회계 부문의 기타부채는 분기결산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기타부채 관련 항목의 변동추세 등을 이용하거나 최근 연간확정치**를 유지하여 추계
 - **중앙정부회계**의 경우 연간 잠정치 작성 시에는 결산자료가

입수 가능하므로 **기타부채 잔액**을 집계

구분	연간 확정통계	분기별 잠정통계
기초자료	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의 결산자료	자금순환통계 기초자료, 내부거래 추가조사자료
공표시기	다음 해 12월	분기말 3개월 후
추계방식		
채무증권, 차입금	결산금액 집계	자금순환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잔액을 집계
정부회계 외 부문 기타부채	"	연간금액을 분기결산기관의 기초자료 증감률로 연장
정부회계 부문 기타부채	"	기타부채 관련항목의 변동추세 등을 이용하여 추정. 다만 연간 편제시에는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잔액 집계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2. 재정통계 적시성 제고 (개선방안, 계속)

- ◆ 분기별 재정통계 데이터는 잠정치로 지칭하고 연간 재정통계의 경우 확정치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관리할 필요
- ◆ 업무의 중복성을 극복하기 위해 잠정치 통계를 작성 시에는 기존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최대한 활용
- ◆ 잠정치의 경우 통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재정통계 수정정책을 수립해서 정보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통계수정은 정기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부, 국회,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할 필요
 - 재정통계에 대한 수정주기는 정기적으로 미리 결정되어야 하고 매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진행
 - 실제 OECD에서 공개되는 분기별 정부부문에 대한 통계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분기별 잠정치 통계는 매년 숫자가 일부 수정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3.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현황 및 한계)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국가채무 및 공기업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 정부에서는 '14년부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하였으나, 공공부문 부채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미비
- 현행 재정건전성 관리는 중앙정부의 부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공공기관의 부채가 각기 개별 법률에 따라서만 관리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

구 분	국가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채무관리계획	지방공기업중장기채무관리계획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국가재정법 제9조의2 및 공운법 제39의2(중장기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 및 제64의3(중장기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작성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정부관리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자산 2조원 이상 및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	지방직영기업 중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 부채규모가 1천억 이상인 직영기업을 대상 지방공사 중 부채규모가 3천억 이상, 부채비율이 200% 이상,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공사 대상
작성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작성시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6월말	9월말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3.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현황 및 한계, 계속)

-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의 비중이 큰 편이고, 향후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단위: 조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채무(A)	533.2	591.5	626.9	660.2	680.5
공공기관 부채(B)	519.1	504.7	500.5	496.1	503.8
B/A(%)	97.4%	85.3%	79.8%	75.1%	74.0%

- ◆ 따라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공공부문 부채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이 마련된다면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
 -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통해 향후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부채총량 및 위험관리에 활용 가능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3.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해외사례)

- ◆ IMF에서는 거시경제 분석의 목적은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할 것을 주장
 - 일반정부의 책임 또는 활동은 예산상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과 예산외 단위 등 여러 정부 단위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립 및 재정분석을 위해서는 정부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
- ◆ EU국가의 경우 EU위원회에 **중기재정계획인 재정안정·수렴 프로그램(SCP: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정부범위는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를 전망**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3.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개선방안)

-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부채계획과 같이 **기존 국가 채무관리계획을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현재 발의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한계
 -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을 확대**하게 되면 '17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전체기관(금융공기업 제외)은 총 482개이며, 이 중 현재 **중장기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기관은 37개(7.7%)**에 불과해서 **기존에 미작성기관의 부담이 과중**
 - 또한 각 기관의 **중기계획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과 맞물려** 있어 **주무부처 및 예산당국의 추가적인 검토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

구 분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합 계	
	작성	전 체	작성	전 체	작성	전 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13	216	24	111	37	327
지방정부 산하 공사·공단		97		54		151
기타기관	-	1	-	3	-	4
합 계	13	314	24	168	37	482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3.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개선방안, 계속)

- ◆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부채 중 기존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기관의 비중은 '17년 기준 전체부채의 94.8%에 달함에 따라 **추가 작성에 따른 비용 대비 효익이 매우 적은 편**

(단위 : 조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A)	중장기 작성기관	44.2	41.2	38.9
		전체	52.8	52.6	50.2
		비중(%)	83.80%	78.30%	77.49%
	비금융공기업 (B)	중장기 작성기관	346.3	340.9	336.3
		전체	358.2	350.9	345.8
		비중(%)	96.70%	97.10%	97.25%
	합계기준 (A+B)	중장기 작성기관	390.5	382.1	375.2
		전체	411	403.6	396.0
		비중(%)	95.0%	94.7%	94.8%

- ◆ 중장기 부채관리계획을 모든 기관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먼저 **기존에 마련된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활용하여 향후 5개년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추계에 활용해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04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3. 공공부문 부채 관리계획 마련 (개선방안, 계속)

- ◆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마련하되 관련 정책을 1단계는 공공부문 부채를 별도로 5개년 추계해서 총량지표로 활용하고 2단계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
 - 1단계에 해당하는 5개년 공공부문 부채 총량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된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최대한 활용하는 추계방안을 제시
 - 공공부문 부채의 주요 구성항목을 분석한 결과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활용(평균 85% 수준)한다면 공공부문 부채의 5개년 중기규모 산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

구분	산출방식	
작성범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	
작성기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PSDS 상 채무증권, 용자, 기타미지급 등을 작성 대상	
추계방안	중기재정계획 활용	국가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지방공기업 재무관리계획
	별도 추계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 미지급이자 등)
		중장기계획 미작성기관
내부거래(자기국공채, 공공부문 간 내부거래)		

감사합니다!

